

19조5천억 추경안 다음주 심사... 여야, 처리 시점 신경전

정세균 총리, 오늘 시정연설...농업·버스업·의료진 지원 등 보완 논의 민주당 "18~19일 처리 목표"...국민의힘 "시한 구애없이 심사하겠다"

국회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여야는 처리 시점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쯤에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을 구성하는 사업 숫자가 70개 정도인 만큼, 상임위 심

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늦어도 오는 15일에는 추경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더 두텁게' 돌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등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면서 "민생추경과 재난지원금에 비한 수위를 높이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혈세로, 빚으로 마련되는 추경을 허투루 줄속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마련한 시간표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영선·조정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시대전환 조정훈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중구 MBN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토론회에서 웃으며 주먹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단일화 '오세훈 vs 안철수'

경선 '불의 전쟁' 시작... '서울시 연립정부 구상·기호 부여' 관건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 제3지대 경선에서 급태섭 전 의원을 꺾고 결승에 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맞붙게 됐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안 후보가 1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앞서 있지만, 나 후보를 누르는 이변을 일으킨 오 후보는 그 기세를 이어 제1야당 후보로서 추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두 후보가 공통으로 중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듣고 "(오 후보와)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오 후보도 안 후보와의 만남에 적극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결국 여론조사 문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는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안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조사 문항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

져 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 나오지만, 당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안 후보 측도 반대에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채택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오 후보가 경선 토론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앞서 안 후보와의 '서울시 연립 정부' 구상을 밝혔던 오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만으로는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안 후보가 호응한다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이전에 서울시 공동 운영에 관한 양자간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밖에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 내지 합당해 기호 2번으로 출마할지, 기호 4번을 고수할지도 관건이다. 최종 단일화 절차는 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18~19일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전남도의회 성명

전남도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 등 도의원들은 이날 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어업인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업, 농어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광생이모자반 유입 등 계속된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수확도 못한 데다 소비까지 줄면서 현재 농어업인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농수산물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출범 요구' 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4일 민주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촉구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속한 세월호 특검 출범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사회적참사TF회 위원장 및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가족들은 지난 7년



을 오로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애원하고 있다"며 "즉시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특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안과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위의 요청에 따른 특검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삼석,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법 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



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지자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 이래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 왔다.

김승남,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 부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이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문의. 010-3605-5000